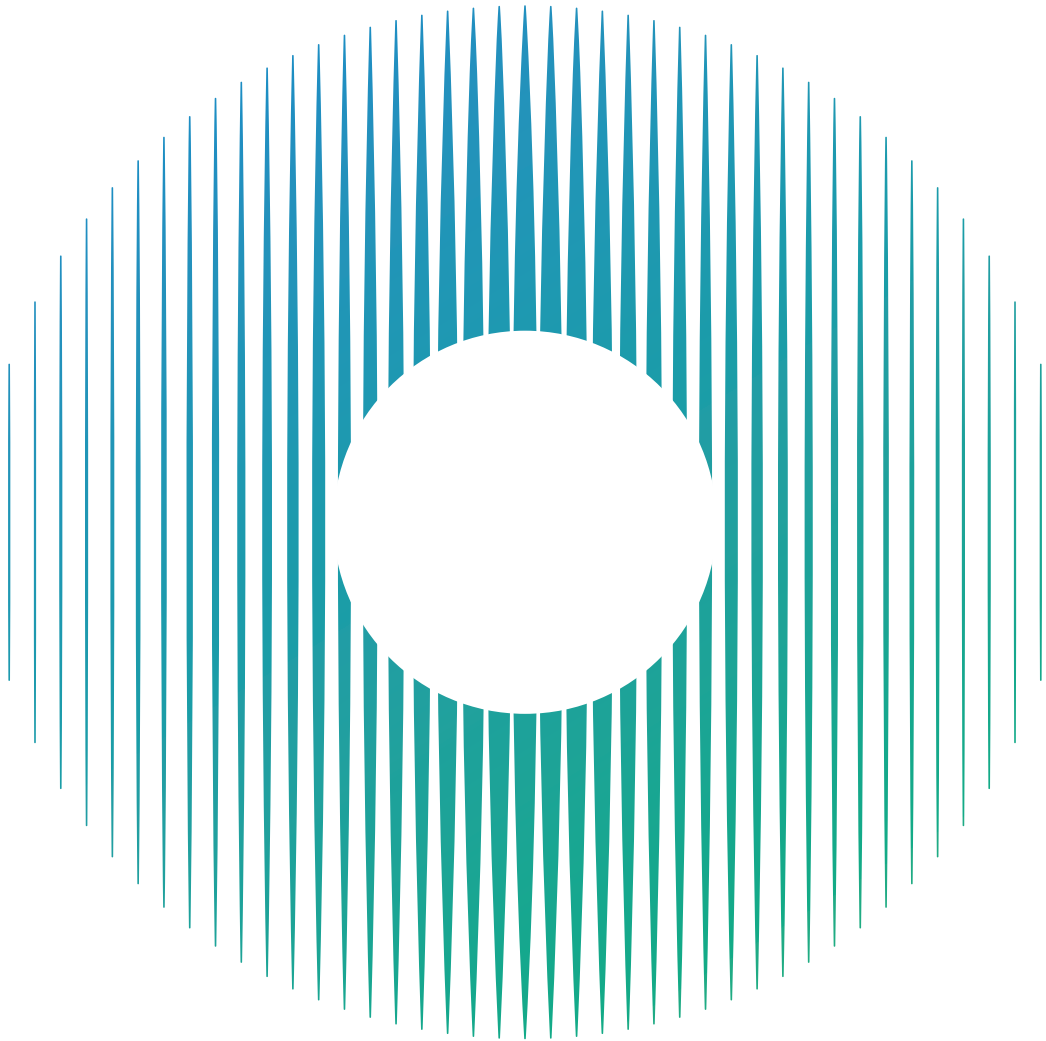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2026년. 6월. vol. 09(격월간)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2026년. 6월. vol. 09(격월간)

행복한 대한민국,
금융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발행인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발행처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

발행일 2026년 6월 25일

제작 (주)현대아트컴

CONTENTS

이슈 노트

살던 곳에서,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최순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업 소개

주민참여 재택의료 모델링 및 고도화 사업

수행기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테마 칼럼 1

AI 문명시대와 대한민국의 '진짜' 국운(國運)

조대엽 고려대 명예교수, 사단법인 선우재 이사장

테마 칼럼 2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은?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테마 칼럼 3

그늘진 곳곳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하며

공광규 범우문화재단 상임이사(전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 본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의 순수 연구활동을 통해 발간되는 보고서로서 재단 정책 및 사업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던 곳에서,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과 정책적 의미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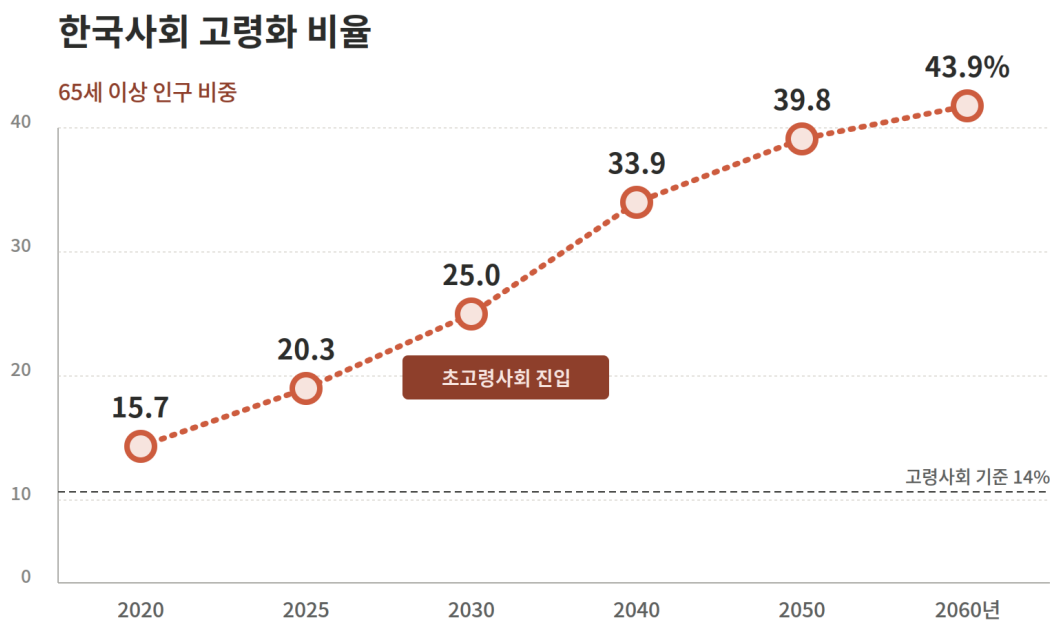


1. 들어가며: 통합돌봄은 ‘서비스 연결’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고,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웃의 집 안에서, 가족의 식탁에서, 병원과 복지관과 동주민센터의 상담창구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노인의 수가 늘어났다는 데 있지 않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아프고, 늙고, 장애가 생기고, 혼자서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림 1]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그동안 한국의 돌봄체계는 가족의 책임,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개별 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에 크게 기대어 왔다. 의료는 의료기관 안에, 요양은 장기요양제도 안에, 복지는 복지전달체계 안에, 생활지원은 또 다른 행정사업 안에 흩어져 있었다. 사람의 삶은 하나인데 제도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그 사이를 메우는 일은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 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 분절을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통합돌봄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제도적 단계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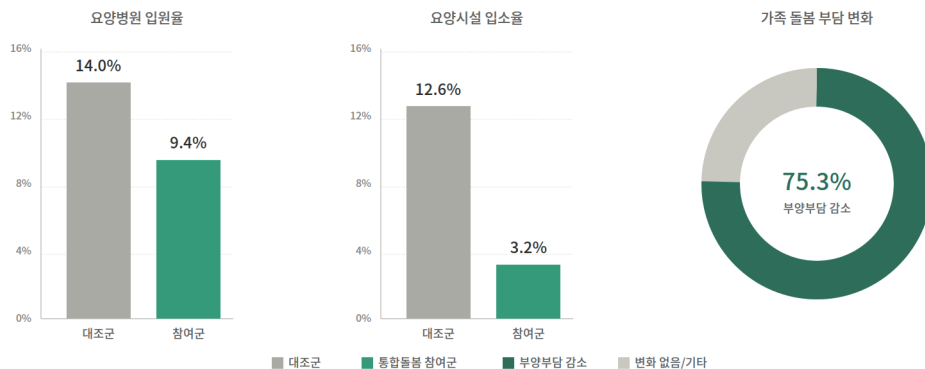
하지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통합돌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돌봄은 서비스의 확충과 행정절차의 연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질병과 몸의 기능, 주거와 식사, 가족의 부담, 이웃관계, 외출과 운동, 죽음에 대한 준비까지 함께 살피는 일이다. 그러므로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가 ‘지역 안에서 얼마나 살아 있는 관계와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의 실천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살림’은 의료돌봄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주민이 스스로 건강과 돌봄의 주체가 되고자 만든 지역 공동체이다. ‘살림’은 창립할 때부터,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다. **“병들고 장애가 생겨도 존엄하게 살기 위해, 지금 여기가 내가 계속 살고 싶은 동네인가, 안심하고 지내는 아는 얼굴들이 있는가”** 이 질문은 통합돌봄 제도화의 시대에 다시 정책적 질문이 되고 있다.

2. 통합돌봄 시대의 과제: 현장의 사례가 필요하다.

정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통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6년 3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낮았고, 가족 등 돌봄 담당자의 부양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¹⁾

[그림 2] 통합돌봄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결과

통합돌봄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2023.7~2025.7, 통합돌봄 참여군 vs 대조군 (총 16,294명)



1)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3.27

이러한 결과는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네 가지 과제가 남는다.

첫째, **의료와 돌봄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방문진료가 이루어져도, 이후의 약 복용, 식사, 이동, 운동, 정서적 지지, 가족의 부담까지 살피지 않으면 집에서의 삶은 지속되기 어렵다. 돌보는 의료로의 전환과 함께 진료 경과에 대한 의료인-돌봄자 간 공유, 그에 따른 진료계획의 수정 등이 상호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둘째, **통합지원계획은 누가 살아 있는 계획으로 만들 것인가.** 계획서가 있어도 당사자의 생활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필요할 때 의료와 복지, 돌봄과 이웃자원을 다시 연결하는 주체가 없다면 통합돌봄은 행정문서에 머물 수 있다.

셋째, **돌보는 사람은 누가 돌볼 것인가.** 가족돌봄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활동가, 이웃 돌봄자는 이미 통합돌봄의 현장에 있다. 돌봄자가 소진되면 돌봄관계도 흔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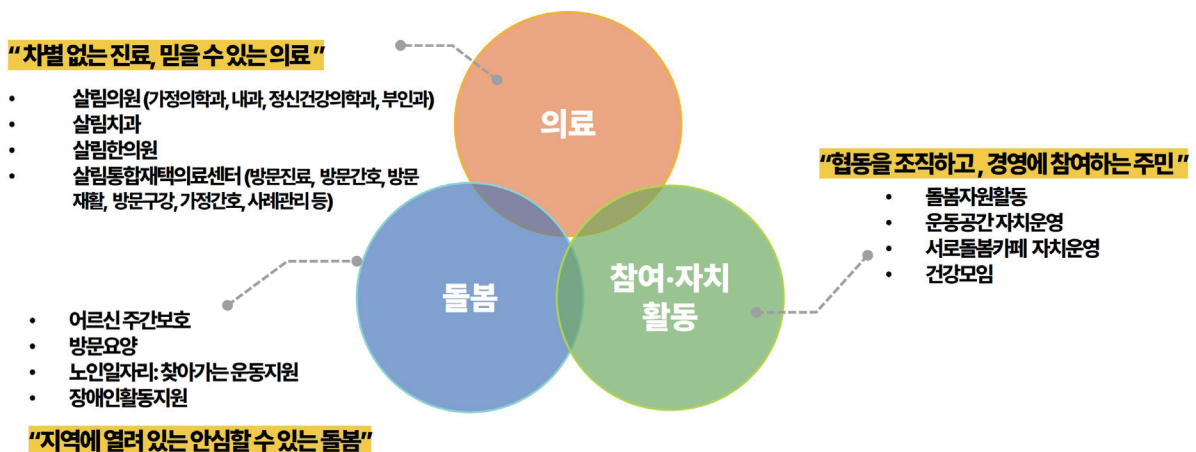
넷째, **지역사회는 서비스 제공의 장소인가, 돌봄의 주체인가.** 통합돌봄이 행정과 기관 중심으로만 설계되면 주민은 다시 이용자나 대상으로 남는다. 그러나 삶은 제도의 바깥에서도 계속된다. 안부를 묻는 이웃, 익숙한 공간, 함께 운동하는 관계, 병원 밖에서 만나는 얼굴들이 돌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살림의 통합돌봄 실천은 이 과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의 응답이다.

3. 지역에 기반하는 주민주도 조직이 그리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림’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믿을 수 있는 의료·돌봄기관 운영, 협동과 자치활동, 자원활동을 추진해 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살림’은 의료·돌봄기관을 운영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건강을 전문가의 처방만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공동의 과제로 삼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다가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바람 역시 스스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그림 3]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업도



* 출처: 살림의료복지사회 제공

이러한 특징(강점)을 가진 '살림'의 통합돌봄은 크게 주요 사업/활동 축과 겹겹이 맞물리며 이루어진다.

첫째, 일차의료와 재택의료의 축이다. 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한의원은 주민의 건강문제를 일상 가까이에서 살피는 기반이다. 여기에 의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 구조가 더해졌다. 살림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정의학과, 치과의사, 한의사), 방문간호사, 가정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팀을 이루어 방문진료, 방문·가정간호, 방문재활, 방문구강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학제·다직능 재택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2026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방문영양 등을 새롭게 시도하며 고도화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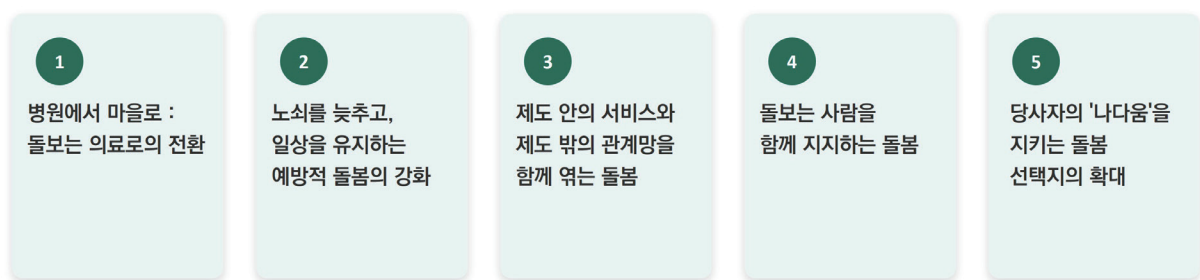
둘째, 돌봄사업의 축이다.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은 제도 내의 돌봄서비스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이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기반하여 주 4일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다른 날은 방문요양·가족돌봄을 매칭, 필요할 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가 결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조정하는 것이 통합돌봄 현장의 중요한 활동이다.

셋째, 주민참여와 서로돌봄의 축이다. 건강거점 다짐, 서로돌봄카페, 건강모임, 건강실천활동, 돌봄자원활동을 통해 우리는 '통합돌봄은 제도사업의 합'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심관계망 위에서 작동해야 함을 끊임없이 재확인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돌봄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즉 '누구라도, 뭐라도,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단단한 핵심이 생겨난다. 2026년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지원을 통해 돌봄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서포터즈를 양성 중이며, 필요와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기대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세 축은 각자의 영역뿐 아니라 서로의 영역들을 끊임없이 교차해 가며 변화,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변화와 혁신은 "병원에서 마을로", "서비스에서 안심 관계망으로", "이용자에서 생산자로" 돌봄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실현의 여정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통합적 의료돌봄의 방향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 통합적 의료돌봄의 5가지 방향성



* 출처: 살림의료복지사업 제공

3-1. 병원에서 마을로: 돌보는 의료로의 전환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료기관은 특히 물리적으로는 접근이 어렵지 않은 자원이다. 그러나 중첩된 질환, 중증도의 질병, 노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주민, 이동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활동지원 등 돌봄자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에게 병원은 생각보다 문턱이 높다. 방문진료는 이 공백에 응답한다. 방문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임상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가정 등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방문진료의 범위에는 기본 진찰, 혈액·소변검사, 소변줄·כות줄·기관지관 관리, 상처(욕창)처치, 수액처치, 예방접종, 복용약물 조정관리, 방문재활, 방문구강, 영양상담, 퇴원 후 연계, 가정임종 교육, 지역 자원연계 등이 포함되며 제공의 폭과 깊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방문진료는 진료 장소가 병원에서 집으로 바뀐다는 것을 넘어선다. 환경을 포함하여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을 전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 **집이라는 생활의 자리에서 몸-관계-환경의 문제를 다시 읽는 돌보는 의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진료실 밖에서는 어떤지, 진료실조차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 한 환자의 집에만 다녀와도 다른 환자의 집을, 그 집들이 있는 마을을 상상하게 된다. 물론 진료실에서만큼 뭘 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왕진을 나가면 다른 게 보인다. 환자를 둘러싼 환경과 가족들이 보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보인다. 진료실에서는 그분의 ‘질환’이 눈에 들어온다면, 집에서는 그분의 생활 전반에 시선이 간다.

-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협 가정의학과 전문의, 따릉이 타고 왕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 글 발췌

그러나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25년 말 기준 4,044개소(의과 1,118개소, 한의 2,926개소)로, 신청한 의료기관은 많지만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시행한 기관은 836개소로 20% 정도에 불과하다. 2026년 6월 16일 기준 현재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가 전국 463개소로 확대되는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추진 중이긴 하나, 방문진료의 필요성 대비 충족률이 8.4%(국회입법조사처, 2024)임을 고려하면 방문진료를 실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다학제팀으로 재택의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 노쇠를 늦추고, 일상을 유지하는 예방적 돌봄의 강화

통합돌봄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쇠를 늦추고, 기능 저하를 예방하며, 가능한 한 오래 자기 삶의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아픈 뒤에 연결하는 돌봄’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서로 살피는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외출 감소, 근력 저하, 낙상, 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진행된다. 이를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 서비스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몸을 움직일 공간, 함께 운동할 사람, 변화를 알아차릴 관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연결망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웃의 변화를 함께 살피며, 필요할 때 의료와 돌봄으로 연결하는 힘이 지역 안에 쌓일 때 통합돌봄은 사후대응이 아니라 예방의 체계가 된다.

‘살림’의 ‘건강거점 다짐(조합원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운동공간)에서의 운동’, ‘평소엔 즐겁고 필요할 땐 안심되는 건강모임’, ‘노년시민·돌봄자·장애인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로돌봄카페’,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서 가능한 건강실천 활동’ 모두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건강이웃’과 같은 통합돌봄 일자리 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前 노쇠 단계의 주민을 행정기관의 의뢰가 아니라 스스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돌봄일자리 사업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의 진입을 지연하는 예방적 효과를 일자리 참여자-이용 주민 간 상호 시너지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우울증과 외부 단절을 겪었던 건강이웃(일자리 참여자)이 우연히 시장통의 떡방앗간을 지나가는데, 문득 바라본 주인 할아버지 부부와 아들의 표정이 예전의 당신을 보듯 너무나 우울하고 활력도 없고 평생에 웃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운동을 권하고 싶단 생각 하나로 용기 내어 방앗간으로 들어가 부부에게 운동을 권하셨대요. 만나 보니 주인 할아버지는 경미한 청각장애를 안고 있었고, 할머니는 파킨슨 증세를 갖고 있는 상태셨어요. 지금도 매주 방앗간을 찾아가 두 부부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일자리 사업 건강이웃 사례

3-3. 제도 안의 서비스와 제도 밖의 관계망을 함께 엮는 ‘연결하는 돌봄’

통합돌봄의 어려움은 제도가 없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제도는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이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장애인활동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노인맞춤돌봄, 돌봄SOS,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동주민센터, 병원 퇴원연계 등 자원은 다양하지만, 당사자와 가족은 무엇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가고, 필요한 신규 서비스 역시 하나둘 개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합돌봄 구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돌봄의 생산자이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스스로 만드는 주민들의 참여를 첫 번째로,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결’ 강화 필요성을 그다음으로 강조하고 싶다.

‘살림’의 주치의 팀은 진료 시 ‘살림’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의료기관 연계뿐 아니라 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제도, 조합의 다양한 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공동체 지원을 연결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낸다. 조합원들이 100일간 건강실천하는 활동 중 ‘저탄고지를 실천하는 모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는 모임’, ‘온라인으로 명상하는 모임’ 등을 추천해 드린다. 근력운동이 필요해 보이면 ‘건강거점 다짐의 발레수업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하는 등 조합원들의 협동과 자치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을 연결하는 등의 사회적 처방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과정 등을 안내하는 사회복지 연결자가 되기도 하고, 상급 병원 동행자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복지관 동행서비스나 조합원 자원활동을 요청하는 케어 코디네이팅도 한다. 이처럼 살림 내부에서도, 내외부를 넘나들며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살림’이 주민참여형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림 5] 살림의료복지사협의 주치의 팀의 내부 연결자원망



[그림 6] 살림의료복지사협의 주치의팀의 지역사회 자원 연결망



통합돌봄은 “서비스 목록을 많이 아는 일”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누가 변화를 알아차리고, 어디로 연결하며,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살피는가. 의료진, 돌봄종사자뿐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건강이웃 활동가, 돌봄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등이 함께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4. 돌보는 사람을 함께 지지하는 돌봄

통합돌봄에서 아직까지 많이 호명되지 않는 주체가 있다. 바로 돌보는 사람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권리와 삶의 질이 지속되려면 돌보는 사람의 삶도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 가족돌봄자는 긴 시간 긴장과 책임 속에 살아간다. 독박돌봄으로 인한 부담감도 더해진다. 돌봄자를 숨겨진 환자라고 불리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해결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사회적 인정과 불안정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킨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은 환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제도 간 경계, 칸막이 등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감당하는 중이다.

돌봄자를 지원하는 일은 통합돌봄의 부가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가족돌봄자와 돌봄노동자를 지원하는 방향성은 다르지만, 사회적 인정, 동료와의 대화, 필요할 때 연결가능한 사람/쉬어갈 수 있는 구조 등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본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은 분리하여 볼 수 없다. 돌봄자가 지치면 돌봄관계도 흔들리고, 돌봄자가 고립되면 당사자도 고립된다. 또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시기에나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는, 어떤 지점에서는 돌봄자가 된다. 이에 '살림'의 통합돌봄은 돌봄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3-5. 당사자의 '나다움'을 지키는 돌봄 선택지의 확대

통합돌봄의 목표는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목표는 한 사람이 자기 삶의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다니던 동네 길을 걷는 일, 식사 전 입체조를 하고 식후 찻술질을 하는 일, 한 번 서로돌봄카페로 나들이를 나와 차를 마시고 수채화를 그리는 일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다.

나에게 필요한 공적 돌봄서비스가 착착 연결된다고 해서 AIP(aging in place)가 실현되는 것이 아님은 이미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 나다움을 지키며 살던 곳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돌봄의 선택지가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봄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고정되지 않도록', '이용자도 생산자도 내가 원하는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돌봄 매트릭스가 필요하다. 돌봄교육을 수강하는 것부터 돌봄자 자조모임을 기획하는 것, 마을돌봄거점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를 망라하는, 밀도 역시 다양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표 1〉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돌봄 매트릭스

돌봄활동을 더 다양하게	인지증 서포터즈, 사전연명의료의향상담, 죽음살롱, 성년후견인교육, 돌봄장 작성교육, 돌봄카페 운영 등
돌봄주제를 더 다양하게	장애인, 1인가구, 반려동물, 마음건강, 주거, 케어러(돌봄자/돌봄노동자 건강지원, 자조모임) 등
돌봄거점을 더 다양하게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마을돌봄 거점 만들기, 지역 마을거점 활동을 돌봄 관점으로 확장하며 공동사업 추진(현재 14개, 지역 연대사업)
돌봄사업을 더 다양하게	돌보는 의료, 돌보는 일자리(찾아가는 운동지원, 경도인지장애 일자리, 재택의료서포터즈 등),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등

4. 나가며: 통합돌봄의 미래는 함께 살아갈 지역을 만드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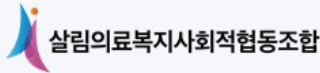
통합돌봄은 행정의 새로운 사업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 병원과 시설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그 이전과 이후의 긴 시간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어진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은 제도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의료, 가까운 돌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나를 기억하는 이웃, 돌보는 사람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함께 필요하다.

살던 곳에서 “끝까지 나답게” 살다가,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죽을 수 있는 마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선 주민들, 제도와 공동체 자원망을 넘나들며 연결을 숨 쉬듯 해내고 있는 의료돌봄 종사자들,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당겨오기 위해 겹겹의 실천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조직들. 여기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시작되고 구현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행정에서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주민참여 재택의료 모델링 및 고도화 사업

수행기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과 협력하여 주민참여형 재택의료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로 높아지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 및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의료와 돌봄, 주민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재택의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의료 제도는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방문 재활, 방문 구강관리, 방문 영양 등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택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건강 취약계층과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체계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재단과 '살림'은 의료와 돌봄, 주민참여를 연계한 통합적 재택의료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다양한 의료·돌봄 전문 인력이 협력하는 재택의료팀을 고도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상태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방문재활, 방문구강관리, 방문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 확산을 위한 재택의료 운영 모듈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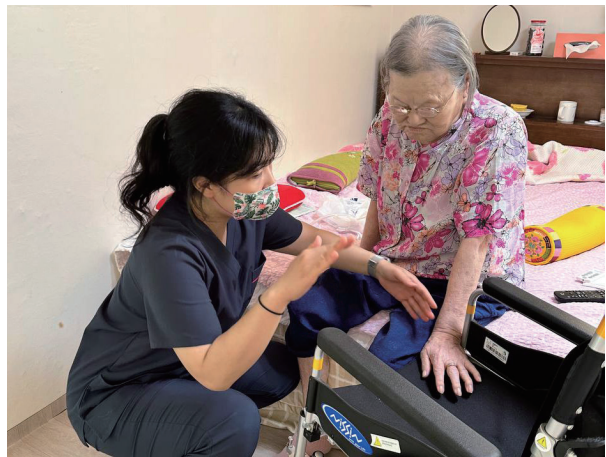
둘째, 경제적 이유로 재택의료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및 돌봄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돌봄 과정에서 건강관리가 어려운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 완화와 건강권 증진을 도모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 서포터즈를 양성합니다. 주민들은 생애 말기 돌봄교육과 이동지원 활동 등을 통해 재택의료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넷째, 사업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한 성과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재택의료 모델의 효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택의료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의료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앞으로도 '살림'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AI 문명시대와 대한민국의 ‘진짜’ 국운(國運)

조대엽 고려대 명예교수, 사단법인 선우재 이사장



AI가 세상과 시대의 화두다. 대통령께서 AI 3대 강국 진입을 공약하고, 실제로 국정외 주요 방향이 AI 관련 정책에 맞추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소모임에서 구윤철 부총리의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AI가 여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관한 내용이었다.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경제정책임에도 스스로 흥분한 듯한 열띤 강의가 오히려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해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서울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서로를 ‘AI 깡부’라고 부르며 친목을 나누는 장면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AI 시대의 ‘4대 천왕’이 경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여기서 젠슨 황 CEO는 한국에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GPU와 AI 인프라를 갖춘 AI 선도국이 될 것이며,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이 소프트웨어 전문성과 기술적·과학적 역량, 그리고 제조 역량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추켜세웠다.

젠슨 황의 메시지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AI, 반도체, 로봇 관련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코스피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무엇보다도 AI 생태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다.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기술의 하드웨어 GPU와 그 모델들인 H100, H200, 여기에 탑재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진화된 모델인 HBM(High Bandwidth Memory)과 현재 주력 모델인 4세대 확장형 HBM3E, 5세대 모델인 HBM4, 나아가 H100, H200의 후속작으로 발표된 B100, B200, 그리고 엔비디아가 구축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CUDA, AI의 미래 비전인 피지컬 AI와 월드 모델 등 AI 생태계의 기술적 용어가 낯설지 않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와 같은 도구를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테크놀로지를 짐작하게 되었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구축한 AI 생태계, 그리고 로봇이나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AI 동맹’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아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 툴로 AI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AI 기술과 AI 경제가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AI 문명을 선도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I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감히 말하자면 ‘국운’(國運)이 열리는 조짐이다. 무슨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기대냐고 할지 모르나 국운은 두 가지 사실에서 근거 있는 전망이다. 하나는 국운이 국정의 탁월한 리더십의 효과라는 사실이다. ‘국정의 리더십’은 최고지도자의 시대를 읽는 통찰이 예리한 비전으로 제시되고, 여기에 국민의 전폭적인 공감의 결합될 때 만들어진다. 통찰과 비전은 지도자의 자질이지만 공감은 깨어있는 시민의 자질이다. 그래서 위대한 리더십은 지도자의 탁월한 통찰에 깨어있는 시민의 공감과 연대가 팔로우십을 만들 때 탄생한다. 국운은 곧 리더십의 예술이자 깨어있는 시민이 만드는 공감의 예술이다.

국운이 근거 있는 전망인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효과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위대한 리더십과 위대한 시민의 공감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국운을 연다. 축적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여는 AI 시대는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비전이 축적된 토대 위에서 빛나는 기회의 문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비전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시작으로 OECD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에 이르는 디지털 코리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보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다,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과 ‘IT 839 전략’으로 진화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의 비전으로 데이터 댐, 데이터 고속도로 등 기초 인프라 강화와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 국토와 정부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진화했다.

나는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전략을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정책적 기원으로 해석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20세기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에 ‘박정희’가 있었다면 21세기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에 ‘김대중’이 있다. 박정희의 산업화 모델이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김대중의 ‘IT 강국·e-코리아’ 비전이야말로 국가부도의 파산 위에 정보화의 기적을 이룬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축복이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통찰과 ‘그의’ 위대한 국민의 공감 능력이 준 선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AI가 여는 이재명 정부의 국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축적 위에서 피어나는 또 한 번의 축복일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의 통찰에다 빛의 혁명을 만든 깨어있는 시민의 공감과 연대가 있기에 국운의 전망은 더욱 밝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열었던 당대의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책의 그늘’을 놓치지 않았던 정책적 안배를 돌아보아야 한다. 진보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형평이 강조되었다. 치열한 정보화 전략 속에서도 정보격차와 취약층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또한 기술적·문화적 소외층을 줄이는 정책적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AI가 인류의 예측을 넘어서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월가를 뒤흔든 시트리니 리서치(Citrini Research)의 보고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는 AI 기술의 성공이 오히려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알고리즘, 빅테크의 거대 플랫폼, 데이터 소유권으로 무장된 ‘기술권력’과, 민주적 통제, 국가 주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방어하려는 ‘사회권력’의 충돌도 현실이 되고 있다.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은 「권력과 진보」(Power and Progress)에서 지난 1000년간 기술의 진보와 통제는 언제나 소수의 몫이었고, 기술의 진보가 모두의 삶을 향상시킨 것은 오로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배층의 선택에 도전하고 기술 이익을 더 평등하게 공유되는 방식을 강제한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AI 혁명을 ‘불의 발견’을 넘어서는 문명사적 진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문명사적 진보의 선도국으로 국운을 여는 일은 고삐 풀린 AI의 위험을 경계하며, 기술권력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훨씬 더 확장하는 정책적 안배에 있다. AI 선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AI 성장주의의 낙관적 비전을 훨씬 더 포용적인 새로운 비전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AI에 관한 포용적 비전은 기술 엘리트들의 박애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 권력 기반에서 나온다. 포용과 협력을 지향하는 진보적 정치사회 기반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배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의 더 고른 배분에 대한 대통령의 더 큰 통찰과 더 큰 시민적 공감만이 AI 문명시대 대한민국의 ‘진짜 국운’을 열 수 있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6.03.06.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은?

- 노조법 2·3조 개정과 산별교섭 체제로의 전환 모색¹⁾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²⁾

한국 사회의 문제 구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놀라운 경제 성장, 그리고 민주화로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 국가가 되었다(UNCTAD 2021, OECD 2022).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8,585억 달러로서 전 세계 13위, 1인당 명목 GDP도 3만 5,96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수출과 수입 규모에서 전 세계 7위 교역 국가로 발전하였다(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그럼에도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삶의 질 종합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회원국 38개 중 33위로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6.4점으로 OECD 평균 6.7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39.8%)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매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23).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과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역설적 상황과 이중성, 그리고 사회현실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에 있어

역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결정적 전환기이자 중대한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라고 할 수 있는 1997년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빚어놓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04년 0.347에서 2010년 0.361로 상승한 후, 2023년 0.333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다시 0.341로 상승하고 있다. 상위 소득 10분위 격차를 의미하는 p90/p10 비율 역시 2004년 5.45에서 2023년 6.94로 크게 상승하였다. 소득이나 자산

1) 이 글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 과제인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극복 대안 재구축 연구'(2025)에 기초한 것으로, 동 연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필자의 직책은 본 칼럼 집필 당시의 것이며, 현재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임(2026.3.30.자 취임)

분포의 무질서도(불균등)를 통해 불평등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엔트로피 지수도 2004년 0.329에서 2024년 0.473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도 2004년 0.0976에서 2024년 0.105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는 세계 불평등을 비교하기 위한 피케티 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 이른바 피케티 비율로 불리는 소득 자산 비율은 9.8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한국은 최근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집중도가 심화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자산 가격이 매우 높아 자산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동 연구(2025)에서 가구소득 대비 총자산액을 의미하는 자산소득 비율은 1998년 3.1배 수준에서 2022년 6.9배로 비율 격차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격차와 자산 불평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반면, 동 연구의 노동시장 불평등 분석에서 불안정 노동 계층이 정규직 일반노동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1998~2003년 12.07%에서 2017~2023년 9.75%로 약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중간계층으로의 상향 이동의 가능성 역시 1% 미만으로 매우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안정 노동 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머무르거나 실업자(약 2% 내외)나 비경제활동 인구(약 13% 내외)로 하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요컨대 불안정 노동 계층의 상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층 이동성을 제약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구조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한국 사회 지속성의 위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청년층의 ‘쉬었음’으로 분류되고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 현재 20대 ‘쉬었음’ 인구는 약 44만 2천 명, 30대 청년층 30만 9천여 명까지 포함하면 약 75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6).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으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대부분은 10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일자리 규모 전망은 각각 5만 1,600여 명과 5만 2천여 명 등 약 10만 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26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 전망은 약 2만 8천여 명이고 나머지는 2만 4천여 명은 청년인턴 일자리이다(노동부 자료 2026). 2024년 기준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 중 취업 대상자가 약 54만 3천여 명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괜찮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통계 2024).

한국 사회 문제의 진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안정 노동 계층의 증가

20~3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 그리고 사내 복지혜택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62.3,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57.7,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41.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내부 통계자료 2026). 이와 같이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 매우 커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대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기 위해 시험'준비중'이거나 '쉬었음'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적체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생각했던 중간 스킬(skill) 수준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대신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특고, 플랫폼노동,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 불안정 고용은 전체 취업자의 37.7%(A)에 이르고 있으며, 저소득 비율은 취업자의 19.6%(B), 제도 및 사회보장 결여는 취업자의 15.1%(C)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지표 모두에 해당하는 불안정 노동자도 전체 취업자의 5.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 청년, 고령자, 그리고 저학력 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문제연구소·중앙연구원 2025).

한국 사회 문제 구조의 해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체가 답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체와 그것을 위한 개혁 방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다. 따라서 해결 방안 역시 단일한 정책 수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체는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의 주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일본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현재 대기업 평균임금(100)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많은 '쉬었음' 청년층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 인구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임금 격차 및 불평등 해소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 시장 영역에 그것을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길을 찾을 것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체의 시작은 개정된 노조법 2·3조의 실행에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 제2·3조의 개정은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 노조법 제2조 개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사용자성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체하는 길은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경남 지역 창원시 타운홀 미팅(26.2.6.)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힘을 모아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한겨레신문 26.2.6일 자). 중소 하청기업의 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적절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노조 조합원 수는 277.7만여 명으로서 노조 조직률은 13%대에 머물러 있다.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을 보면 300명 이상의 기업은 35.1%로 높은 반면 100~299명 5.4%, 30~99명 1.3%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71.7%(공무원 66.4%, 교육 32.3%)로 매우 높은 데 비해, 민간 부문의 조직률은 9.8%에 불과한 실정이다(노동부 통계자료 2024). 따라서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한 토대로서의 노조 조직률 확대는 민간·중소·영세 부문에서의 노조 조직화 사업에 달려 있다.

‘87년 대립적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 모색

원청과 하청기업 간 단체교섭, 개별 기업노조 차원을 넘어 산별노조 체제로 나아가야

3월이 되면 노조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것이다.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립적 기업노조 체제하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 차원에서의 원하청 교섭을 점차 산별교섭 형태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개별 사업장 내 노사 갈등의 외부화이다. 둘째는 산별교섭 및 단체협약 사항의 확장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법제화 절차가 필요하다.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도입은 87년 노동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노동정치의 지형을 만들어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다 같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자의 조직률 확대와 산별 조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을 전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자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한 하이로드(high-road) 일자리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6.03.30.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그늘진 곳곳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하며

공광규 범우문화재단 상임이사(전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금융산업노사는 지난 2010년대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대하여 대화하고 합의를 통해 출연 협약을 도출해 왔다. 사회공헌 관련 여러 내용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해 왔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 4일 33개 금융기관 노사가 뜻을 모아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출범시킨 것이다.

재단은 노동조합 측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금 인상분 일부와 출연금을 모아 공동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다. 노사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은 약 1,850억 원 규모다. 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해오던 사회공헌사업 외에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계로 사업의 폭과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당연히 각 금융회사별로 해오던 사업 내용과 규모도 정리되고 통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환경 및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필자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합의 및 설립 당시 교섭내용 정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금융산업공익재단에 대한 노사 합의와 설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단 합의 초기에는 노사 실무진으로서 재단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기금 모으는 방법, 어떤 사업을 할지 등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었다. 옛그제 같은데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설립 초기와 달리 사업영역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 그만큼 재단이 발전하고 인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설립 초기에는 노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것과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현재는 4개 사업영역을 정하여 실천 중이다.

포용금융 영역에서 제도권 밖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교육 사업, 일자리 영역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미래세대 영역에서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지원사업, 지역상생 영역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과

자조를 돕는 사업 등이 눈에 띈다. 물론 설립 초기에 논의했던 사업영역이나 내용에 비해 많이 달라졌고 수준이 높아졌다. 발전하고 있다는 증표다.

지난 2025년 한 해 성과를 살펴보니, 다양한 사업 내용과 함께 사업비와 수혜자는 물론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수혜기관의 수도 상당하다.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 사업이나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주배경 청년과 노동자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방송작가유니온 사업도 새롭다.

글로벌 차원의 사업인 스리랑카 지역기반 여성자립 및 학교급식 사업과 필리핀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도 생각해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진 지금 이런 글로벌 사업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도 성장과정에서 선진 외국의 도움이 있었다.

초기에는 사업 내용을 정하지 못해 노사가 머리로 짜내거나 외부 청탁에 의존했다. 지금은 사업을 국민 대상의 완전 공모제도로 바꾸면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가의 사회복지망이 닿지 못하는 이곳저곳을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어루만지고 있다는 생각에 재단 설립 합의와 설립 실무자로서 기쁘기 그지없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업 미션은 국가의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필자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금융권의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믿는다. 때문에 재단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국내외 국가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늘진 곳곳을 개선하기 위해 곳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6.04.20.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